原電 방정식의 해법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추출실험이 불거지면서 우리 원자력계에 국제적인 눈총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은밀히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의 디모나 원자로, 이란의 부셰르 원전 및 파키스탄의 핵유출 의혹 등에 쏠렸던 눈길이 마치 희생양을 찾기라도 했다는 듯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고 있다. 정확한 사정이야 어떻든 우리 원자력계로선 만만찮은 시련에 직면한 셈이다.

■ 내우외환의 한국 원자력

국내적으로 원전정책이 불신을 받는 것은 또다른 시험대다.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신고리 1·2호기 원전을 당초 계획대로 건설키로 최종 결정하고도 착공을 미루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최근 열린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도 원전의 추가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됐다는 얘기이고 보면 정부 일각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감지된다.

그런 점에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문제가 차질을 빚는 것은 차라리 부차적 문제에 속한다. 마감일을 코앞에 두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비청원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데서도 원전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지난번 부안사태에서 경험했던 그대로일 것이다. 현재 환경·반핵단체들이 민관 공동으로 운영될 '방폐장 협의기구'에 대한 참여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니 주목된다.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아니라도 태양광·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원전을 제쳐둔 채 다른 에너지만으론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내 최대전력수요는 해마다 2백50만kW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번 여름 5천1백26만kW를 기록했으며, 이 수요의 40%를 원전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발전 비용을 따지자면 아직은 원전이 훨씬 경쟁력을 지닌다.

환경 측면에서도 오히려 원전이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없지 않다. "화석연료 발전소를 원전으로 대체하지 않는다면 전세계는 온난화로 인한 환경재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영국의 기후학자 제임스 러브록 교수의 경고가 대표적이다. 유럽연합의 경제사회위원회(EESC)도 "원전이 아니고는 기후변화협약을 제대로 준수하면서 전력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원전이 최선이라기보다 원전을 대체할 만한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뜻일 것이다.

원전정책을 포기했던 핀란드·스위스·스웨덴·벨기에 등 유럽 각국이 다시금 원전정책으로 돌아서는 모습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드러난다. 더욱이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 원전국인 프랑스의 경우 파리 시민들의 상수원인 센강의 가까운 상류에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데도 거부감이 거의 표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로선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다. 무려 59기의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유

■ 정부 투명한 정책 급선무

이처럼 사회적으로 폭넓은 공감대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투명한 정책이 요구된다. 하지만 " ' 원자력 마피아 ' 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 " 는 소문이 떠도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극소량이지만 우라늄 농축실험을 하고도 지금껏 감출 수 있었던 것도 원자력정책에 중대한 허점이 있음을 말해준다.

계속 지연되고 있는 방폐장 사업에서도 폐기물 포화시한이 ' 1995~2001~2008년 ' 으로 자꾸 늦춰짐으로써 공연히 국민을 겁주려는 듯한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여기에 폐기물 압축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으므로 부지면적을 대폭 줄이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신규 원전도 이미 계획이 진행 중인 신고리 · 신월성을 제외하고 다른 후보지는 모두 해제시킨 다음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허영섭 논설위원

<출처 : 경향신문 경향의 눈 2004. 9. 14>